투자 임금 상생협력보다 세금이 싸다…
사내유보금 세금 1조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해 1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발표한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8544억원 대비 2114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33억원에서 4279억원, 7191억원, 854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1조658억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법인수도 조금씩 늘었다.

데이터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기준이며, 초과환류 등의 사유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 2018년까지 환류대상은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배당이 2019년부터 배당은 환류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취지가 대기업들이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와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오픈

참여연대는 '세계 주거의 날'인 4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를 공식 오픈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입자114는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이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주거운동 관련 개인 회원들이 주축이 돼 세워졌다.

상담을 원하는 세입자는 평일 오전 10시~낮 12시 사이 전화(010-4794-0114)로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 등 수도권 세입자를 중심으로 상담을 제공하지만, 점차 활동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세입자114 이강훈 신임 센터장은 "그간 세입자 당사자 단체들은 있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고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많지 않았다"며 "기존 세입자 단체들과 연대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거래소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5곳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고 한국거래소가 공시했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보고서 기재 내용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한 기재 충실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첫해인 2019년 54.5%에서 작년 70.2%, 올해 78.8%로 올랐다. 또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평균 준수율도 같은 기간 47.9%, 49.6%, 57.8%로 꾸준히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주주 권리 보장과 감시 기능 강화 부문에서 특히 개선 폭이 컸다. 주주 권리 항목을 보면 ▲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2019년 11.8%→2021년 28.6%) ▲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47.2%→63.4%) ▲ 전자투표 실시(24.2%→72.0%), 명문화한 배당정책 수립(25.5%→46.3%) 등의 준수율이 2년 새 높아졌다.

거래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